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43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21. 1. 12./시행 2022. 1. 13.)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개정 2021. 12. 16./시행 2022. 1. 13.)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 개정(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영 제41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

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행정관리국 사무명 6호 중 나목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  
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감  
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단순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7급 김영아 (02-2286-5128)

## < 관 계 법 규 >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

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 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

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